

1. 2007년 정세 핵심 : ‘대통령 선거’와 ‘한-미 FTA’

- 올해 국내 정세는 17대 대통령 선거로 모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농업계 내외부의 변수는 다음과 같다.
 -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 헌법 개정안 제언 및 현실화 여부, 범여권의 신당 창당 움직임과 야당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계개편 등의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
 - 특히 올해 대선 및 내년 총선 과정에서 ‘한-미 FTA’는 우리나라 정치·사회·경제 문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농업계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미 FTA는 타결의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 1월 15일 6차 협상을 전후로 쟁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한 정치적 차원의 ‘주고받기 식 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 작년 12월 5차 협상에서 한미간 핵심 쟁점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와 대통령(청와대)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2월 16일(설날 직전) 미국 워싱턴에서 7차 협상이 열려 완전 타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은 명확한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간 협상이 타결된다면 내년 2월 대통령 취임 및 4월 총선을 사이에 둔 시점에서 국회비준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농업 및 농민운동의 주변 여건은 갈수록 악화

- 올해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정책을 강행할 것이며, DDA 농업협상이 급진전될 우려가 높다.
 - 한-미 FTA를 비롯하여 한-캐나다, 한-인도, 한-EU(유럽연합)간 FTA가 추진될 예정이며, 우리 농업에 결정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한-중 FTA에 대한 사전 공동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에 여야 보수 정당들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및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FTA 확대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더욱이 작년 말 재개된 DDA 농업협상의 급진전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1월 8일 미국 부시 대통령과 EU(유럽연합) 바로수 집행위원장은 핵심 쟁점인 농업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고 DDA 협상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자국 의회에 신속협상권한(TPA)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미국 경제단체들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어 DDA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하지만 국내 농업 여건과 농민단체의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 경쟁은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농협의 시장대응력은 매우 취약하다. 한농연 회원 등 핵심 영농주체의 경영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악성 농가부채로 인한 경매 조치 등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 1990년대 이후 농업생산구조가 급변하여, 대부분의 작목에서 전업농가와 규모화된 농가의 생산 비중이 높아져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미 축산 분야에서는 양돈·낙농·양계 등에서 소수의 기업화된 농가가 생산을 전담하고 있다. 정부가 품목별 단체에게 각종 사업자금과 자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품목별 단체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 하지만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은 읍면동·시군구 등 기초조직들이 큰 어려움을 맞고 있다. 농가부채 문제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회원들의 활동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3. 2007년 한농연의 농권운동 전개 방향

○ 한농연 조직 운영의 기본틀을 확고하게 다져나가기야 한다.

-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한농연은, 국내 최대 농권운동 단체로 성장하였지만 기초조직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금 직면한 읍면동·시군구 조직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야만, 한농연은 핵심 농권운동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 이에 한농연은 제13대 중앙 집행부의 출범을 계기로 읍면동·시군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실천해 나갈 것이다.
- 특히 “중앙-시도-시군구-읍면동” 조직간 농정 현안 및 정책 과제를 제대로 공유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한-미 FTA 저지 활동과 대선 대응활동을 통해 2008년 이후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한 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 올해 12월의 17대 대선과 내년 4월의 18대 총선이 예정된 시기에 한-미 FTA는 한국 사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며, 향후 예상되는 한-미 FTA의 체결 혹은 비준 시기에는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과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를 적극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사실상 마지막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때문에 한농연은 한-미 FTA 저지 활동과 대선 대응활동을 적극 연계하여,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한 농정 기초의 전환과 함께 핵심 농정 과제의 농민중심적 해결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 농가부채, 농협 개혁, 양곡정책, 농가소득대책, 농업재해대책, 농촌복지, 투융자 정책 전면 혁신 등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하여, 정부와 정치권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한농연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